방통위원장 지명·차관 교체 '숨 고르기'…이번주 넘길 듯

대통령실 "다음달로 넘어 갈 수도"
다수 비서관 차관 후보 거론
연쇄 이동에 교통정리 시간 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카드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차관 교체를 포함한 정부·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해외 순방 이후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24일 프랑스·베트남을 순방할 예정으로, 순방 전이나 도중에 인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기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애초 이르면 이번 주에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으나, 잦아들었다"며 "인사 검증 문제 등 여러 쟁점이 돌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제는 타이밍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 결심에 달려 있지만, 이번 주는 아닌 것 같다.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19개 정부 부처 차관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교체, 전면 개각에 버금가는 쇄신 효과를 의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던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들까지 차관으로 발탁, 정부 부처에 전진 배치해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세간에 도는 하마평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며 "다수 비서관이 차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차출에 따른 후임 비서관 인선까지 인사 폭이 커지면서 내부 '교통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경력이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국정 과제 추진력 등이 인선 기준으로 우선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여전히 유력한 상황이다.

이 특보 내정설에 '지상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명을 재고할 만큼 심각한 치명타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지배적 인식으로 읽힌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다음 주 후반께 결론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화하는 시점도 그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관 인사와 방통위원장 지명이 시점상 같이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뒤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와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내년 총선 능력 중심 민심 공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외연 확장에 힘 기울이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년 총선에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인 오늘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며 "작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의회 권력 지형을 '여대야소'로 바꿔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집값 폭등, 전·월세난, 일자리 증발, 세금폭탄, 소득주도성장, 정부 보조금 빼먹기, 건폭, 원전폐기" 등 지난 정권의 '비정상' 사례를 열거하면서 "무능한 지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그릇된 정책들은 부메랑이 돼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국익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진영논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올바른 인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등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흔들림 없이 결연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00일이 당내 혼란을 극복해 당을 안정화하는 데 방점을 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외연 확장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그간 지지받지 못했던 세대, 지역에서도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며 "우리 당의 취약지역, 취약 세대,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보다 각별하게 챙기고, 더 자주 만나 뵙고 허심탄회한 바닥 민심을 듣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의도 제1당이 '중도·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비위 등 도덕 불감증에 기인한다"며 당의 도덕성 확립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읍참마속을 하면서 도덕성 확립을 실천해 왔다. 앞으로도 당의 도덕성을 확고히 세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그어, 수준 높은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범죄 비리 옹호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연평해전 24주년 맞아 "압도적 힘만이 진짜 평화 가져다 줄 것"

"北 무모한 도발 단호하게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는다. 1999년 6월 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 북한은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며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고 적었다.

이어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 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 대 강' 대치 속 맞은 6·15 23주년…"남·북·미·중 머리 맞대야"

김대중평화센터 학술회의 개최
北은 언급 없고 남한도 행사 없어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을 맞아 남북공동선언의 계승 의지를 다지고 평화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열렸다.

김대중평화센터가 15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개최한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학술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첨예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남북 대치구도가 심화하고 교류가 단절된 실태를 우려하면서 남북 모두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교류를 회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김대중 정부는 군사적 해결보다는 외교와 대화를 강조한 결과로 '페리 프로세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탄생시켰다"며 "북한과 계속 대결적 구도를 취했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가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당근을 무시하고 채찍만을 내리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 고착화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입지도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무모한 군사모험주의는 북한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다"며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교훈을 곱씹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면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대는 방법밖에 없다"며 남북이 중심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평화회담' 모델을 지지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북 지원단체들은 인도적 대북지원의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대북지원물품에 제재품목이 포함되면 지원단체가 UN의 제재 면제 허가를 거쳐 통일부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및 UN대북제재위원회에 절차 간소화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기존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뒤 "인도적 대북협력은 '상호성'을 가져야 한다"며 감염병·기후변화 대응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북한은 이날 6·15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